

# 收斂假說의 中國經濟에의 適用可能性에 關한 研究 ( On the Applicability of Convergence Hypothesis to China's Economies )

林熙喆\*

## 目 次

- I. 序論
- II. Tinbergen의 收斂假說
- III. 民生主義의 本質과 臺灣에서의 그 實踐
- IV. 共產主義革命과 中國大陸에서의 經濟改革
- V. 兩側의 接近程度 現況
- VI. 結論

## I. 序論

中國大陸에서는 開放化 · 分權化 · 自由化가 進行되고 있다. 그에따라 우리나라에서도 大陸을 向한 進出意欲이 旺盛히 일어나고 있다. 이것이 開放化가 持續될 것이라는豫見下에서의 行動이라면 그것은 中國大陸에서의 開放이 臨時方便일뿐 共產主義 或은 社會主義 또는 中央計劃經濟 即 統制經濟를 指向하는데는 變함이 없다는 視覺도 있다.

市場經濟에서 機會가 있는 곳이면 어느곳 어느때던지 뛰어드는 것이 마케팅의 本領이라면 永續하려는 企業이 있을수 있는 危險에 對處하려함은 經營哲學의 重要한 한 部分이다. 即 現代經營은 危險을 敢行하려는 側面과 危險을 延避하려는 兩面이 있다. 그러므로 論議의 兩面은 둘다 있을수 있고 또 있어 마땅 하다.

開放을 있는그대로 하나의 趨勢로서 받아 들일것이냐 或은 그것이 現段階의 必要에 따라 臨時方便일 뿐이냐 하는것을 따지기에는 보다 긴 時間에 걸친 觀察이 있어야 할 것이다. 中國大陸에서의 變化가 10年間繼續되고 擴大되어왔고 또한 그것이 今世紀末까지는 틀림없이 持續돼야 하고 또 21世紀初 30~50年間의 長期目標까지 그들의 指導部에서 公

\* 本研究所 研究員, 社會科學大學 貿易學科 教授.

## 產業研究

表하고 있다는 點을 考慮하면 向後 半世紀間은 開放·自由化가 暖急은 있을망정 進行할 것임은 믿어도 좋다고 생각된다.

그것과 關聯해서는 1950年代 後半以來 蘇聯 東歐에서 間歇的으로 그러나 꾸준히 伸張되어온 分權化가 더욱進展되고 있음을 參考할만 하다.

여기에서 우리는 1960年代에 歐美에서 關心을 크게 갖어었던 收斂假說 (Convergence Hypothesis) 을 中國大陸과 臺灣經濟間에의 適用可能性을 打診해보는 것도 意味를 가질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洋의 東西와 나라間에 環境差가 있다는 點을勘案하더라도 自由市場과 國家統制의 兩極으로 부터의 離脫과 相互接近에 있어서의 思考方式에는 共通的 要因 또한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中國에서는 收斂假說이 適用可能할 것으로 느껴진 特別한 理由가 있다. 그것은 中國大陸과 臺灣이 發展段階上의 差異에도 不拘하고 같은 中國人이라는 데에서도 그 特性이 같은 것이고, 特別히 臺灣은 經濟政策의 指導理念으로 民生主義를 基調로 하여 왔으며, 中共도 三民主義의 繼承者를 自處하고 있기 때문이다.

臺灣은 過去 40年間 民生主義經濟政策을 實踐하여 臺灣經濟가 均衡·成長을 持續하여 世界의 驚嘆과 부러움을 사고 있으며, 中共은 처음 10年間 社會主義 經濟建設에 立脚하여 均衡과 成長을 이루는듯 했으나 그後 20年間은 成長에 種種의 阻害要因이 생겨 停滯乃至는 後退함으로서 國民生活이 落後되었으며, 最近 10年間 開放과 公權化로 成長을 다시하게 되었다.

딴 어떤 先例에게서 배우지 않더라도 各自 스스로의 經驗에서 어느方向으로 갈 것이냐는 이제 거의 決定되지 않았겠느냐고 想慮된다.

社會體制의 變動의 理論에도 收斂 Convergence Hypothesis 의 假說外에 公散의 假說 (Divergence Hypothesis)가 있어 社會의 變革에는 어떤 改革 또는 現案에는 極端을 向하여 擴散되는 傾向이 例컨데 戰時經濟와 같이 一部品目的 統制가 全面的統制로 치닫는 境遇와 같다는 說이 있고, 또 相異한 事物 (그 속에 體制도 包含되지만)은 어떤 形態와 水準을 維持해 나가려는 平行進化의 假說 Parallel Evolution Hypothesis가 있다.<sup>1)</sup>

1. James R. Millar, On the merits of the Convergence Hypothesis, Journal of Economic Issues, Association for Evolutionary Economies,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Mar. 1968, pp. 60-69.

### 收斂假說의 中國經濟에의 適用可能性能에 關한 研究

各說은 各各의 視角에 따라서 그 妥當性이 認定 되겠지만, 公散假說은 戰時經濟나 革命經濟와 같은 短期間의 變革이나 適用可能할 것으로 平行進化假說은 東西洋이나 相異한 宗教 또는 傳統에 따라 安定된 數千年의 超長期的 現象에 適當할 것이며 우리가 關心갖는 數世紀의 長期的 觀點에서는 收斂假說이 妥當성을 갖일지도 모른다.

近代經濟學은 對外의으로는 植民地爭奪戰의 涼中에서 對內의으로 產業革命의 涼中에서, 200餘年前에 自由主義經濟理論과 政策이 發生하여 進展되었고 100餘年前에 共產主義理論이 發生하여 蘇聯에서 70年間 大部分의 共產圈은 2次大戰後에야 그 政策이 施行되어 왔다. 中國은 廣大한 國家로서 極少數의 植民地化를 免한 狀況에서 想定可能한 兩極化時代에 適應하되 그 각각의 痘弊를 豫見하여 兩者의 長短을 中國의으로 調和 取扱한 民生主義經濟哲學을 創出해 내는데 成功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것의 始發이 修正資本主義로서의 厚生經濟學보다도 앞서고 修正社會主義보다 앞서기 때문에 그 獨創性을 認定해야 할지도 모른다.

생각컨대 收斂이 이루어질때는 兩極端의 中間으로 接近해 갈 터인데 民生主義는 伸縮的인 經濟政策의 指導原理같아서 兩極은 民生主義方向으로 收斂될 可能性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것이 本稿의 觀點이다.

그것이 一方的接近이나 雙方의接近이나에 關係없이 兩極의 어느 中間線으로의 接近傾向이 確認되면 그것이 곧 收斂可能性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에따라 將次의 政治·體制上의 接近까지도 透視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것은 民生主義가 指向하는 經濟政策의 中國의 指導原理가 所有 및 國·公營의 몫이 西方國家의 그것보다 훨씬 크며 同時에 市場經濟가 保持되도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兩쪽이 共히 收容可能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以下에서는 收斂假說의 内容을 吟味하고 兩者의 變化狀況을 吟味해본 다음에 兩者間에 收斂可能性을 檢討해 보기로 한다.

II. Tinbergen 의 收斂假說<sup>2)</sup>

自由經濟와 共產主義經濟의 兩極間에는 共存이 있어 보이고 여러面에서 收斂의 方向으로 움직임을 보인다. Tinbergen은 그의 論文緒頭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그 收斂을 向한 變化를 兩쪽에서 共히 보이고 있는 證據를 提示하였다. 그가 提示한 共產主義經濟의 變化를 要約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共產主義經濟의 變化

- a. 勞動者가 할수있다고 생각하던 經營을 專門化하는 것이 더욱 效率的임을 알게 되었으며 모든 專門化에 反對하던 過去의 原則이 弱化되고 있다.
- b. 初期엔 布告令에 依할때의 當然한 結果로서 所得의 劇的인 均等化를 試圖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賃金率을 生產性과 結付시키게 되었다.
- c. 初期에는 物量으로 計劃하던 것이 次次 貨幣單位를 使用하게 되었고 價格과 原價의 重要性을 더욱 더 認識하게 되었다.
- d. 資本財의 私有權을 박탈함으로서 利子를 不必要한 概念視 했었으나, 그것이 私的所得이 않되더라도 生產原價를 構成한다는 點을 無視할수 없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 e. 過去 施行해 오던 配給制가 撤廢되고 消費에 있어서 選擇의 自由가 制度化되었으며 차츰 生產의 目的으로서 消費를 重要視하게 되었다.
- f. 數理經濟의 計劃을 오래도록 資本主義의 라고 唾棄하였으나, 이제 그것이 客觀的이고 有用하다고 하여 널리 論議·適用되고 있다.
- g. 共產國家間貿易과 自由圈과의 貿易에 對한 概念이 深大한 變化를 이르키고 있다. 그리하여 各國이 제각기 重工業을 發展시켜야 한다는 思考에서 脱皮하고 있다.

## 2) 自由主義經濟의 變化

變化는 自由主義經濟쪽에서도 있어 왔다. Tinbergen이 提示한 西歐에서의 變化를 간추

2. Jan Tinbergen, Do Communist and Free Economies show a Converging Pattern? Soviet Studies, Vol. XII, Apr. 1961, pp. 333-341.

## 收斂假說의 中國經濟에 의 適用可能性에 關한 研究

려 보면 다음과 같다.

- a. 公共部門이 매우 擴大되었으며 特히 西歐에서는 公共必需財 (Public Utilities) 가 公營化되었을 뿐 아니라 鐵道, 電車, 石炭, 製鐵, 保險, 銀行까지도 公共部門에 編入된 나라도 있게 되었다.
- b. 西方經濟에서의 租稅는 國民所得의 25% 前後가 되어, 經濟活動의 重要한 調節因子 일뿐 아니라 國民貯蓄에서 政府貯蓄이 큰 몫을 차지하게 되었다.
- c. 自由競爭이 여러가지로 制限된다. (獨禁, 標準化)
- d. 義務教育이 實施되었다.
- e. 一部 不安定한 分野와 市場機能이 制限되었다. (農產品, 商品協定)
- f. 計劃의 重要性이 增大된다. 一部工業과 遠隔地 또는 貧寒한 地方에 對한 開發政策 으로 稅制上 特例와 政府投資가 이루어진다.
- h. 反인프레對策으로 物價 賃金에 對한 直接統制가 加해진다.
- i. 反公害 其他 여러가지 社會立法이 事業을 規制한다.

### 3) 兩側의 差異

以上은 兩側이 接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아직도 다음과 같은 현격한 差異 가 있다.

- a. 民間部門의 크기의 差
- b. 企業의 意思決定의 自由의 幅의 差
- c. 計劃의 細部化程度의 差
- e. 物價統制(中央·直接과 間接)의 差
- f. 產業民主化的 程度의 差 (西方에서는 特定問題에 對한 勞使間 共同決定, 東方에서는 企業의 計劃과 利益處分에 關한 討議에 參加)
- g. 教育機會의 差
- h. 貯蓄率의 差
- i. 國際企業의 原理와 投資事業의 優先順位에 對한 視覺差

4) 共產側이直面하는問題

- a. 效率性的問題
- b. 生產의 意思決定上의 企業의 裁量權擴大與否 (中央計劃으로선到底히消費者欲求에 따른品質과 구색을 맞출수 없다)
- c. 中央計劃對象品目數를 줄이는 問題 (貿易計劃品目包含)
- d. 固定價格의 變動價格化의 問題 (物件이 不足하면 비싸짐은 當然하지 그것이 傷害운 것이 아닐텐데)
- e. 아주根本的인 問題인데 經濟制度의 範圍를 넘지만 (西方概念의) 民主主義의 擴大可能性의 問題

5) 西方이直面하는 問題

- a. 現在 公共部門의 크기가 適當한가 與否
- b. 企業側은 政府가 一般經濟豫測과 市場分析을 더 해주길 바란다.
- c. 計劃을 어느程度까지 細分化하느냐
- d. 인프레에 對處하는 價格策定方式의 問題
- e. 教育機會의 擴大問題
- f. 產業民主化程度의 問題

6) 「中間에 最適點이 있지않고 오히려 最適點을 向한 傾向은 极에 있다」는 思考와 關聯한 問題

이와같은 論據는 「한번 市場價格形成에서 離脫이始作되면 全體經濟가 規制되기까지 자꾸자꾸 規制를 强化할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實例로 戰時經濟統制가收斂 (Convergence) 아닌 擴散 (divergence) 傾向을 보여주는 것이 있다. 即 一部市場에서의 配給이나 價格規制를 하기 시작하면 곧 그外의 市場도 統制할수 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政府干與에 適用되지는 않는다. 景氣循環政策에서와 같이 需要의 全體흐름을 適切한 手段 (財政·金融政策) 으로 規制하면 나머지는 市場勢에 마껴도 된다던가

### 收斂假說의 中國經濟에의 適用可能性에 關한 研究

또는 少數의 不安定한 市場(農產物)을 規制하면서도 그외의 市場을 規制할 必要가 없다는 것 等이 論據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西歐에서는 生產手段의 國公營化가 相當期間 一定한 規模로 維持되면서도 그것이 擴大될 必要가 없었던 것이다. 計劃도 마찬가지여서 經濟의 主要部分에 對한 計劃이 반듯히 細部分까지 計劃해야만 하는것이 아니다.(初期共產國家에서의 私有財產의 抹殺은 政治權力에 依해서 理念上 理由로 差別받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經濟體制는 極端을 向하는 傾向이 있는것이 아니며 收斂을 向하여 움직인다는 理論을 定立할수 있다. 그렇지만 最適의 經濟制度는 나라에 따라 또한 時期에 따라 다를 것이며, 最適點이 어디에 位置하느냐 또는 그들의 福祉의 頂上을 찾을려고 試圖함에 있어서 實際로 東西間의 合致點이 있을 것인지를 곳 正確히 指摘할수는 없을 것이다.

### 7)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新生獨立國家(에 對한 期待)

東西어느쪽에서도 屬하지 않는 新生國家들은 그 어느편에 對한 先入觀이 없으며, 그들의 最高의 生產水準과 安定이라는 必要에 直面하고 있다. 그런가운데 그들은 東西兩經濟를 쳐다보며 그들로부터 배우려고 한다.

그들은 急速한 經濟成長에 무엇보다도 關心을 갖고 議會民主主義같은 것에는 關心이 없다. 計劃이 尊重되고 政府의 이니셔티브는 個人이 解決하려하지 않는 것을 解決하며 價格形成에 對한 政府干與는 그들이 흔히 特別히 不安定한 市場(一次產物)에 依存한다는 點에서 選好한다.

이들 國家에서의 여러狀況으로 보아 共產主義와 自由企業의 長點을 取하여 結合시키려고 試圖하는데 有利한 立場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經濟體制의 試驗場이 될 것이다. 그들을 한 部分의 開發을 넘겨둔채 一據에 最善의 解決을 하려고 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해볼 만도 하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이 일어나는 社會形態를 特別한 關心을 갖고 지켜볼수 있을 것이다.

## III. 民主主義의 本質과 臺灣에서의 그 實踐

完全 自由의 思想은 市場의 自動調節機能에 依存하고 政府의 干與가 없어야 한다. 그것

## 產業研究

은 完全競爭이 前提가 되는것인데 그것에서 생기는 不平等으로 因해서挑戰과 制約을 받게 되었다. 即 1770年代에 Smith의 自由主義는 그時代에 이미 造成돼있는 狀況 即 「富의 偏在下」에서의 競爭이었던 것이다.<sup>3)</sup> 그하여 그로 因한 不平等의 排除를 위하여 Max主義와 Fabian主義가 생겨났고<sup>4)</sup> 한편 巨大企業의 市場競爭沮害에 對하여 獨禁法으로서의 規制<sup>5)</sup>는 蘇聯에서의 Marx主義의 實驗이 開始되기 以前에 自由市場이 競爭을 沮害하는 要因을 内包함에 警戒함을 보여 준다. 그 무렵 西歐에서는 厚生經濟學派가 抬頭하여 政府干與의 擴大必要성이 強調되고<sup>6)</sup> 中國에서는 民生主義가 胎動하여 國家와 民間의 協助와 役割分擔을 強調하게 되었다.<sup>7)</sup>

民生主義를 自由經濟說 即 私有制를 排除하지 않는다는 點을 重視하여 經濟計劃(計劃經濟가 아님)을 唱導·實踐하려는 것인가<sup>8)</sup> 또는 計劃經濟說 即 孫文은 自由經濟를 主張한바없고 計劃經濟를 獨創的으로 唱案한 것으로 이것은 蘇聯式 社會主義가 아닌 中國의 計劃經濟로 民主的이지만 自由經濟를 主張함이 아니라던지<sup>9)</sup> 計劃的自由經濟說 即 國家計劃과 個人自由를 相互配合하여 相補的인 것으로서 自由經濟를 살리되 그 缺點을 國家計劃으로 치유하는 方式이라는說<sup>10)</sup> 등이 있으나 구태어 어느 既存流派에 歸屬시킬 必要是 없다고 생각되며 獨創的인 것은 끝내 獨創的인 것으로 解釋해야하지 않겠느냐 思慮된다.<sup>11)</sup>民生主義는 그 目標를 均富에 두고 그것에 到達하기 위한 方法의 骨幹은 平均地權과 節制資本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自由競爭을 大前提로 한 것이다. 自由·競爭 없이 人類는 活力과 創

3. 國富論(1776)에서는 傳來의 貴族의 莊園과 產業革命過程에서 商工人的 既히 善積된 財에 對해서 特別히 論한바 없다.

4. Marx가 急進共產主義革命(1848)을 부르짖은데 反해서 Sydney Webb等의 Fabian-social society(1884)는 產業革命의 先發國家인 英國에서의 社會改良을 累進課稅와 會立法으로 推進하되 궁극에 가서는 產業의 公共所有 및 管理를 理想으로 하는 一種의 漸進的 社會主義團體로 把握된다(河合榮治 即, 英國社會主義史研究, 日本評論, 1948, 參照)

5. 獨禁法은 美國의 Sherman Act(1890)과 Clayton Act 以後 特히 二次大戰後 生產 國에서立法化되었으나 獨寡占 그 自體의 禁止보다 競爭阻害를 억제하는 것을 主眼으로 하는 것이다.

6. Marshal의 新古典學派가 Pigou의 厚生經濟學으로 承繼되었으며 이것이 다시 Keynes의 有効需要理論을 派生시켜 1930年代 New Deal 改革과 Marshal plan으로 具體화되어 對內外의 으로 國家の 干與幅 擴大를 가져왔다.

7. 1911年 辛亥革命以前에 이미 孫文의 三民主義는 그 骨格이 形成되었다.

8. 何浩若, 自由民主的 經濟制度, 1960.5, 民生主義以自由經濟學本位,而非計劃經濟學位.

9. 任卓宣, 三民主義新辭, 菲米爾書店, 1977, pp.428-435

10. 羅時實, 從經濟學看 國父思想, 中正書局, 1970, pp.65-68.

11. 自由經濟說을 主張하는 사람도 그것이 舊來의 自由가 아니라고 하고 計劃經濟說을 主張하는 사람도 그것이 蘇聯式 또는 共產社會主義의 計劃經濟가 아니라고 한다. 그리하여 中國의 獨創的 經世濟民을 道라한다.

## 收斂假說의 中國經濟에의 適用可能性에 關한 研究

意를 發揮할수 없고 그것없이 經濟發展은 期待할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自由競爭은 제各己 能力を 最大限發揮시킨다는데 그 意義가 있는데 競爭은 出發點이 同等해야 하고 途中에 反則이 없어야만 決勝點에서의 優劣에 論難의 諸地가 없게 된다. 平均地權은 同一線上에서의 出發을 期하고 節制資本은 남을 넘어뜨리던지 走行線을 逸脫함을 防止하려는 것이다.

平均地權은 可觀的인 祖上 傳來의 財富를 農者有其田 住者有其屋으로 平準化해서 人生競走에서 同一出發線을 則定하는 것이다. 同一線上에서의 出發이라하더라도 數萬· 數億의 人口가 競走함에 있어서는 出發點에 따라서 有利한 走行線이 있을수 있고 不利한 것도 있으리라. 이를 時運이라 하자. 또한 走行中 順凡이나 逆凡을 만날수 있고 또 둘부리에 걸릴수도 있겠거니와 暴雨暴雪 地震等 天災地變을 만날수 있으리라. 그러나 天災時運을 人災와 混同한 中國人 또는 現代人은 없을 것이다.

人災란 앞서 단밀수 있는 者를 잡아 넘어뜨리거나 길을 막는 경우이다. 天災 時運은 再起와 舊發을 낳아 發展에 障害가 되지 않지만, 人災는 報復의 惡循環으로 退步를 自招한다. 여기서 人災의豫防法 即 公正한 競爭을 確保하려는 것이 節制資本이다.

節制資本은 資本利用에 正道를 指示한다고 思慮된다. 即 巨大企業이 市場獨占에서 얻을 수 있는 超過利潤의 取得과 不公正去來의 壞害를 豫防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市場이란 要素市場과 製品市場을 網羅하는 것으로 여기에 어느商品의 市場을 壟斷할수 있게 될 企業의 集中이나 巨大化를 規制해야 한다. 또 民間에 委任하자니 資本動員이 容易치 않거나 또는 자칫 市場獨占의 虧慮가 있는 一部市場에는 國公營을 原則으로 하게 되어 國家의 干與가 必要하게 된다.

돈을 正當히 벌데 그것을 쓰는데도 公共의 利益과 背치되어서는 않된다. 例컨데 投機가 齊來하는 社會·經濟的病弊는 漲價歸公으로 對應한다. 即 價格騰貴에서 오는 不當·不勞所得은 租稅 其他 政策手段으로 國庫에 歸屬시킨다는 것이 漲價歸公이다.

여기에는 金融政策面에서 補完하는 바가 있으니 그것은 投機目的資金需要에는 貸出을 하지 않는 것이다.<sup>12)</sup>

12. 1980年 台灣에는 台北市全體家口數에相當하는 45萬戶의 空家가 있었다. 이는 前年に 있었던 不動產價格의 急上昇에 便乘한 投機의 余波였는데, 建築業者大會는 金融支援을 해줄것을 외쳐했는데도, 政府當局은 끝내 應하지 않고 1年未滿의 短期貸出 뿐에 許容하지 않았다. 이것은 銀行貸出을 받아 長期投機하고 穗값으로 供給하라는 意圖로서 1年内에 供給하지 않으면 公賣處分하겠다는 것이다.

## 產 畜 研 究

民生主義者 經濟政策의 指導理念으로 하는 臺灣經濟는 Tinbr gen이 提示한 西歐에서의 政府干與幅을 充足시키고도 더욱 進展되어 있다.

첫째 市場競爭의 公正性을 確保하기 위하여 꼭 必要한 “生來의 可視的富의 偏在”를 除去하는 平均地權의 一部를 構成하는耕者有其田을 實現하였다.

이는 中國大陸側에서 實施하였든 農地改革으로, 이것을 成功的으로 實現한 自由國家는 韓國과 臺灣外에 그 類例가 거이 없는 것이다.

都市에서의 平均地權의 實行은 農地에 比하여 더욱 複雜하고 至難한 것이다.

住者有其屋이라 해도 그것을 平均權으로 改革하려면 都心의 房한칸과 敷外의 房한間 사이에는 큰 差異가 있다. 뿐만 아니라 商用土地나 建物은 이問題를 더욱 複雜하게 한다. 그리하여 이 部分의 實現을 위하여는 超過保有에 對한 累進課稅와 適切한 公用收買等으로 繼續努力中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節制資本과 關聯해서 臺灣에서는 基幹產業뿐 아니라 一部 非基幹產業 例컨데 專賣인 煙草와 酒類는勿論 建設業, 林業, 鹽業, 製糖業, 精油業, 石油化學 原料工業 等에 公營이 參加하는데까지 進展되고 있다. 이는 市場의 獨占可能性을 排除할 必要가 있을 境遇와 景氣下降局面에서의 勞動力吸收雇傭과 景氣上昇局面에서의 勞動力放出效果까지 期待할수 있는 것이다.

獨占과 市場壟斷을 防止하고자 하는 努力에 이만큼 깊이介入한 自由國家는 거이 없다.

세째, 漲價歸公과 關聯하여 臺灣에서는 매우 徹底히 租稅行政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비단 累進課稅의 嚴格한 執行뿐 아니라, 特히 價格의 急激한 變動이나 投機에 對應하는 데에서 發見되는 各部門間 協助等 또한 注目할 바라고 생각한다. 例컨데 不動產의 告示價格, 標準價格 그리고 自進申告價格의 세갈래 基準을 租稅行政, 金融與信, 政府收用(買) 等에 각各政策手段에 活用하고 있다.<sup>13)</sup>

네째, 市場價格의 形成과 サービス에 提高에 商業的으로 干與하고 利潤의 適正與否를 가리는 裝置로서 「競爭公營」<sup>14)</sup>이라고 부를수 있는 民間企業과 競爭하는 公營企業이 있다.

13. 課稅에 있어서는 最高價로 하고,貸出擔保나 政府收用에는 最低價로 한다던지 하는 絶妙한 政策이라思慮된다.

14. 國營企業은 普通獨占企業이다. 그러나 台灣에는 民間企業이 있는 分野에 公營業이 있다. 그 例로는 國出機關한 退伍官兵輔導會傘下에 있는 建設, 交通, 大理石, 清涼飲料 等에 걸친 數多한 榮民公司가 있다.

競爭的公營事業의 效果는 우선 市場에서 民間企業과 競爭하기 때문에 國公營事業의 官僚主義 不經濟를 排除할수 있고, 다음으로 民間企業에 對해서 原價의 過多計算에 依한 超過利潤取得의 餘地를 없애고, 그러므로써 그다음에 消費者 負擔을 適正하게 하는 效果도 낳고, 끝으로 競爭의 結果로 商品이나 씨비스의 實을 떨어뜨리지 않고 改善하는 等으로 集約할 수 있다. 또한 코라와 같이 外國原料의 獨占供給을 받아서 加工 包裝하여 市販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效果가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다섯째, 商品의 生產要素와 產物의 價格面에서 各種 合作社의 役割을 注目할 必要가 있다. 이것은 얼핏 歐美式 協同組合(Cooperatives) 또는 業者團體(Association) 아니면 勞組(labour union)等과 一致한다고 混同하기 쉬우나 實은 이것은 “中國的協同組織”이라고 생각된다.

여기서 中國的協同組織이라는 表現은 마치 農協과 같이 生產要素와 生產物의 需給, 價格 그리고 構成員의 福祉增進과 國民生活間의 調節機能을 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機能을 갖인 合作社는 農業뿐 아니라 各業種에 걸쳐서 組織되어 있으며 제各己 構成員의 福利와 同時に 公共의 利益을 調和 調節시키는 功能을 遂行한다.

#### IV. 共產主義革命과 中國大陸에서의 經濟改革

共產主義 또는 그 過渡的段階라는 社會主義經濟의 本質은 供給과 配給을 國有 또는 公有하고 公營한다는 것이며 따라서 中央에서 一切을 計劃하고 統制한다. 中共도 例外는 아니어서 그 패턴에 따라 經濟를 運營해 왔으며, 다만 中國的特色으로 地域別自主計劃 即 地域의 廣狹에 關係없이 작이도 全商品自給 카도 全商品自給이라는 所謂 複線管理制度<sup>15)</sup>를 採擇하였든 點이 다르다면 다르다.

이와같은 極左路線의 痘癥은 中國大陸에서도 例外없이 나타났고, 그結果는 1978年의 第11次中央執行委員會 3次全員會議에서 宣言되고 그 實行이 持續되고 있는 經濟改革이다.

그 改革의 初期數年間은 比較的 덜 複雜한 農村地域에서 試行하여 人民公社의 解體와 一部自留地의 許容 그리고 計劃達成後生產品의 自由市場販賣를 許容하는 것으로 始作하였다. 그것이 無難히 成功하고 난후 1985年頃부터 都市改革에 本格着手하여 海岸人

15. 游仲勳, 中國經濟を見る眼, 有斐閣, 1985. 12. 9.

## 產業研究

口密集地域의 省市에 여러개의 特區를 創設하여 그곳들을 隔離管理(마치 自由貿易地區같이) 하는一方 全體都市生活의 改革을 漸進的으로 行하고 있는 中이다.

이를 登小平等 그 指導部의 言辭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不均衡成長의 甘受: 均衡과 成長의 普行하기를 希求하면서도 그것의 達成은 至難하며, 成長을 위하여는 均衡을 犥牲해야 하고 均衡을 取하면成长이 抑制된다는 現實은 否認하지 못한다. 1978年 中國大陸에서의 經濟改革은 過去의 成長阻害의in 均衡追求路線에서 脱皮하여 不均衡成長을 追求하는 路線으로의 轉換인 것이다. 過去에 (좋게보아) 無作定 均衡만을 追求한 中國을 包含한 모든 共產國家에서 이것이 實證되었다.

「우리는 一部地方과 一部企業 一部勞動者 農民이 热心히 일하고 더큰 成果를 올림으로써 他보다 더 높은 所得을 올리고 他보다 더 일찍 잘 살게 되는것을 許容해야 마땅하다.」

이는 登小平이 그의 經濟改革과 開放을 始發함에 있어서 한 말인데, 여기에는 過去中國經濟運用의 失敗를 自認하고, 어느 程度까지 不均衡을 甘受해야 한다는 것이 含蓄된다. 우선 地域格差에 對해서 그는 地域間均衡發展은 不合理하다고 하고 이렇게 이어갔다. 即中國大部分 地方이 開發되고 나면 政府는 落後地方開發에 盡力할수 있을 것이며 또 先發地方도 그들의 資本과 技術을 落後地方에 注入함으로써 落後地方의 資源開發과 生產商品을 開發하는데에 助力할수 있을 것이라고 하여 成長優先主義를 說明해 나갔다.

成長優先: 그는 個人間 所得格差도 認定하여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說明했다.<sup>16)</sup> 即 오직 極히 豐요할 社會에서만 “各自能力에 따라서 그리고 各自 必要에 따라서” 分配를 實現할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今日의 社會主義의 課題는 生產性을 向上해서 民生(People's livelihood)<sup>17)</sup>을 日益 增進시키고 社會의 富를 繼續增大해 나가는 것이다. 가난에 죄든 共產主義도 없고 社會主義도 없다.

「富者가 되는것」은 잘못이 아니다.(To become rich is not a crime).

社會主義의 原理는 첫째 生產을 發展시키고 그 다음에 共同繁榮을 追求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原理는 富益富 貧益貧의 兩極化를 防止하는 것이다.

16. Almanac of China's Foreign Economic Relations and Trade, 1987, pp. 6-12.

17. 여기서 民生이란 用語에 留意해야 할것이다. living standard와는 달리 livelihood는 生活에 活力を 불어 넣는다는 意味가 含蓄된 民生主義의 民生으로 解釋될수 있다.

## 收斂假說의 中國經濟에 의 適用可能性에 關한 研究

이것은 必是 그의 持論이요 또한 復古主義를 누르기 위한 말 일지도 모른다. 그는 이것을 確信시킬만한 中國經濟의 長期 비전을 提示한바 있으니, 1986年 週間 “展望”誌에 載한 論文은 다음과 같이 要約된다.<sup>18)</sup>

### 中國經濟의 長期展望：

第1期 過去 7年餘間 (1979—1986) 은 그다지 크지 아니한 變化만 갖어왔다.

第2期 現在의 當面 努力은 (今世紀末까지) 中級變化를 위해 盡力하는 것이다. 이期間에는 GNP 를 4倍로 增大시키고 1人當國民所得을 800 ~ 1,000 美弗을 達成하는 것이다.

第3期, 세번째 變化의 實現을企圖하는 것은 더욱 重要하다. 21世紀의 처음 30~50年間에 GNP 를 다시 4倍 또는 그以上 增大시키는 것이다. 그때까지에는 4大現代化 計劃이 実成되었다고 할것이며, 經濟成長이란 意味에서 先進圈에 進入했다고 할수 있게 된다.

GNP 4倍增이면 1人當 4,000 弗이되어 그것 自體는 中進國水準이지만, 그때가 되면 人口가 15億이 되어 GNP는 6兆弗이라는 括目할 數值가 되는 것이다.

### 都市生活의 改革：

그는 1980年代 後半에 中國이 해야 할 일은 本格的變化를 齊來하기 위한 條件을 創出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 條件은 改革이며 그 改革은 7個年計劃期中 (1984~1990)에 完結해야 할 可謂 都市經濟構造의 改編이라고 할수 있는 改革인 것이라고도 했다.

이와같은 改革은 쉬운 일이 아니어서 危險이 따르고 심지어 失策도 저질러질 수 있을 것이다. 사소한 失策은 避치 못할 것이지만 重大失策은 避해야만 한다. 그러기에 中國人은 우선 果敢해야 하고 그다음에 慎重하지 않으면 않된다고 果斷性을 促求하고 아울러 警告도 하였다.

都市構造의 改編은 成功的으로遂行한 農村改革에서 본받을 것이다. 事實 이것은 廣範圍에 걸친 綜合的改革으로 教育, 科學技術, 商業, 循環部門, 交通, 電信 심지어 3次產業까지 包括하는 것으로 農村改革보다 훨씬 더 複雜한 것이다.

### 都市失業의 解決：

登은 農村人口의 都市流入을 根絕하여 都市勞動力의 純增만을 解決해야 한다고 하였다. 即 中國은 年間 700萬의 就業人口가 增加한다. 農村改革의 成功的遂行으로 農村人口의 都市流入은 停止된다. 農村과 小邑에는 여러가지 商品을 生產하는 工業이 育成되었고 農工統合이 이루어졌다. 이제 都市改革만 이루어지면 失業問題는 解決된다는 確信을 갖는다고 하였다.

18. Dong Xiaoping, Remarks on Reforms, Open Policy, Peace and Development; Weekly “Outlook”, No. 44, 1986.

## 產業研究

그리하여 都市改革은 都市失業 問題의 解決方案으로 推進됨을 暗示하고 있다. 그런데 그 實踐은 開放으로 市場經濟에 맞기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틀림없다. 그것은 다음으로 이어지는 그의 글이 證明한다.

### 開放의 持續性과 意志:

「開放은 長期間 不變의 政策이다」라고 천명한 그는 中國의 法이 바뀔것을 憂慮하는 소리도 들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中國에 投資하는데 危險은 없고 投資者的 利益은 保障된다는 것을 保證한다고 強調하였다. 萬一 法에 하자가 있으면 改正될수 있다는前提下에 外國全額投資會社에 關한 法은 外國投資에 對하여 有利한 與件을 造成해 주려고 하는 것이라는 點을 다짐한다.

中國은 今世紀末까지의 開發과 21世紀의 보다 野心的目標를 達成하기 위해서는 對外開放政策을 꾸준히 밀고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이政策은 對內外兩面에서 今世紀와 21世紀의相當期間까지 遂行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中進國隊列에 끼이는 것이 不可能하다고開放의 當爲性을 力說하였다.

그러면서 成長을 위해서는 政府와 企業이 果敢해야 한다는 點을 再三 指摘한다.

### 果斷性과 技術習得:

過去數年間의 開放은 大體로 成功的이었으나 거기에는 障害도 있다. 그 障害는 다음과 니라 아직도 中國人은 知識이 缺如된다는 것이다. 無識은 無能力이며 能力이 없으면 勇氣가 없게된다. 이點을 克服못하면 中國經濟의 高速成長은 期待할수 없다.

日本의 經濟의 take-off는 外資의 果敢한 導入과 外資의 適正利用으로 始作하였다. 그때의 日本과 지금의 中國은 處한 狀況이 다르지만, 中國은 外資의 活用技法을 배워야하고 改善해서 經濟開發速度를 높이는데 中國自身의 道標를 세워야 한다. 바로 이點이 中國이 모자란 點이다.

外國의 對中投資者는 技術移轉에 인색하다. 그리고 그와같은 생각이 經營者로 하여금 外資活用에 果斷性을 發揮하지 못하게 한다고 指摘하고 이 問題의 解決에는 두가지 側面이 있다고 하였으니, 그 하나는 中國側이 더욱 開放하여 投資環境을 改善하고 同時에 外資活用에 果斷性을 發揮해야 한다. 反面에 外國側은 技術移轉에 더욱 관대해 주길 바란다는 希望事項이었다.

適正利潤制의 導入：

그리하여開放의 實效를 견우기 위해서는 投資環境의 改善이 時急한데 여기서는 利潤制의 導入이라고 하였다.

外國人이 中國에 投資해서 利益을 끌을리면 投資할리 萬無하다. 너무 높은 原價는 利潤造出의 餘地를 없앨 것이므로 中國은 決斷코 投資環境을 改善해야 한다.

開放과 投資 雙方이 合理的이야 한다. 過度한 利潤稼得도 正當化되지는 못하지만, 지금 時急한 問題는 (投資企業에) 不利한 投資環境의 改善이라고 하였다.

## V. 兩側의 接近程度 現況

學問은 흔히 極端論과 折衷論으로 兩分 또는 3分된다. 學問으로서의 經濟에도 自由放任主義라는 自然法的, 個人主義的 立場과 共同生產, 共同消費를 指向하는 共產主義의 兩極端과 그 中間에 位置하는 混合經濟 또는 折衷主義로 나누어 볼수 있다. 便宜上 兩極을 前者는 極右 後者는 極左라고 할때 混合乃至 折衷主義로 3分된다. 現實에는 兩極을 向하는 分散(Divergence) 傾向이 있을수 있으며, 흔히 兩極의 그 中間 어데선가 合致되는 方向으로 變化하여 가는 過程 即 收斂(Convergence)의 傾向을 띠을수 있다고도 한다.

收斂可能性을 보기 위하여는 그 變化 過程이 重要하고, 어느點 또는 어느線까지 그 變化가 이루어질것인가는 時間과 나라에 따라 差異가 있을 것이고 따라서 甚히 複雜하고 困難한 問題이다.

民生主義가 本格的으로 施行된것은 1949年以後 臺灣에서 였으며 中國大陸에서의 改革은 1978 以後의 일이다. 前者は 近40年間 施行하여 그것이 거이 定着되었고 後자는 約10年間 施行하여 그 改革의 幅이 擴大되고 있는 중이다.

더우기 臺灣은 그規模가 작아서 行政이 複雜하고 農林資源이 豐富하여 春夏季節밖에 없어 國民衣食住解決이 比較的 容易하며 또한 四面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으로서 國防에 어려움이 덜하다 할수 있는데, 반해서 中國大陸은 그 國土廣大하여 氣候風土多樣하고 地域에 따라 資源의 豐乏과 人口의 偏在 그리고 開發程度差가 유심하여 매우 複雜하기 때문에 衣食住問題의 解決만 해도 더 힘들 것이다.

如何間 臺灣의 經濟가 左方向改革의 餘地는 더 以上 없거나 적고 中國大陸의 經濟가 右



表1) 經濟改革對比表

中國大陸側				臺灣側			
極右		現行		現行		極左	
(1) (中央指令)	原料, 部品, 製品供給 * 納期, 品質, 過不足, 使用可否 등 不問, 無責任 * 無活力	(契約制)	契約違反時 爭訟不能, 國家, 地方政府, 企業間 平等, 但, 企業은 國公營이 壓倒의임	(法定契約制)	法定限度內 權利, 義務, 民間企業이 壓倒의이나 國公營企業도 多數있음	(完全契約制)	約定權限 義務無制限, 最少의 國家干與 * 與弱肉強食의 弊害可能性
(2) (重視實物)	生產量 또는 生產總額만 關心 * 利潤追求 不許, 나태要因	(利潤制)	利潤, Cost, 利子 概念 認定	(利潤制)	適正利潤超過分 歸公	(利潤制)	利潤取得에 無制限 * 富益富 貧益貧의 弊害可能性
(3) (計劃調節)	2次下達 1次上達後 計劃 * 目標達成與否 無關, 無責任 * 機敏性缺如	(計劃調節依從)	計劃達成後 市場商品生產, 販賣, Service可能	(市場調節依從)	市場勢에 依하되 國民經濟과 公共利益 위한 計劃加味	(市場勢放任)	最少의 國家干與 * 國益과 公共利益 不顧
(4) (複線制(中國式))	縱的計劃 { 國家計劃案(長期) 國家經濟案(短期) (소聯式)      各部處가 規制  橫的計劃: 地域別計劃 (中國에서 附加) * 硬直性, 不經濟	(企業權限擴大)	複線制의 硬直性打破, 地域마다 全製品自給自足의 不經濟打破, 地域聯關係로 全體와 調和	(法定外企業經營保障)	企業權限 保障하되 公共責任負荷	(企業經營無制限)	最少의 國家干與 * 公共利益侵害可能 * Bubble會社 橫行可能 * 獨占指向
(5) (管理行政體系)	各地에 散在하는 數多한 企業 行政部署가 統制 * 企業間 有機性 缺如 * 專門性 缺如 * 官僚主義慢延	(業種別聯合公司綜合管理)	中央에 業種별 公司가 同一業種各地公司 綜合管理, 專門性, 有機性 確保	(企業自律)	企業의 自律에 맞기데 公營法人과 合作社 通한 間接管理, 租稅 및 金融面에서의 管理	(國家管理排除)	企業에 放任 * 不當行爲, 投機, 非正常慢延可能性 * 地域偏重의 餘地 * 獨占의 弊害
(6) (企業淘汰)	不適合, 不實, 長期缺損企業도 存續 豫算浪費, 나태, 無責任性	(企業整理)	關·停·並·轉 即 企業의 閉鎖, 操業停止, 合併, 業種轉換可能	(自然淘汰)	法定手續必須, 叫로 法定管理	(自然淘汰)	最少의 國家干與 * 資金橫流後 解散可能性 * 失業問題, 消費者, 下請者 不顧
(7) (企業形態)	國公營外 不許 官僚主義와 無責任性 慢延	(個人請負의企業經營)	유고式 勞動者自主管理와 差異: 여기선 個人이 請負하여 獨自의 management 所謂自己責任, 自己計算에 依한 經營	(公營爲從)	民營을 原則으로 하되, 民間投資忌避業種 政府投資專賣事業 市場競爭事業一部에 公營參與	(官營不容)	最少의 國家干與 * 非正常利潤追求 * 獨占의 弊害
(8) (價格)	全面公正價格 慾求無視,	(部分市场价格)	計劃內 商品公定價格, 計劃 外 市場價格	(價格)	自由市場勢에 맞기면서 各種裝置로 弊害最少化 努力	(價格)	最少의 國家干與 * 暴利, 買占賣惜, 市場交亂
(9) (雇傭)	終身雇傭, 就業에 自己意思無視 * 나태부성의 無責任慢延	(勞動契約制)	解雇認定, 自己意思에 依한 就業	(契約雇傭)	標準樣式에 依한 契約認定하되 法定不認定事項있음, 法定時間	(類似契約雇傭)	相互自意간 一方他意간 不平等契約 * 酷使, 不當解雇 慢延
(10) (賃金)	能率에 關係없는 基本給 * 나태, 活力 없어짐	(變動賃金制)	基本給 + 能率給	(契約賃金)	基本給 및 諸手當 + 賞與 + 成果給	(類似契約賃金)	一方他意 또는 相互自意라도 不平等立場, * 쟁취可能性



## 收斂假說의 中國經濟에의 適用可能性에 關한 研究

方向改革의 餘地는 아직 더 進展된 餘地가 있는 것으로 思慮된다.

다음表는 兩極으로부터 中國大陸에서는 極左로부터 어느程度까지 改革이 進行되고 있으며 臺灣에서는 極右로부터 어느程度까지 改革이 되어왔는가 하는 것을 對比 一覽할 수 있도록 作成해본 것이다. 여기서 對比項目과 中國大陸側의 狀況은 遊仲勲氏의 中國經濟을 見る眼에서 抽出한 것이며, 臺灣側의 그것은 魏氏의 民生主義經濟學, 鄭昆如氏의 三民主義哲學, 그리고 先總統蔣公財經思想之研究 및 蔣經國先生論著劄記等에서 抽出하고筆者의 判斷으로 補填한 것이다.

여기서 보건데, ①項과 關聯하여, 中國大陸側에서는 指令經濟<sup>19)</sup>가 特性인 極左의 無責任性의 弊害를 契約制導入으로 어느程度 治癒된다고 볼수 있으나 國公營이 壓倒的이어서 契約違反時 責任追窮이 徹底하지 못할 可能성이 있어, 法制面補完과 民營擴大를 要한다고 본다. 臺灣側에서는 現經濟人 economicus 을 假想한 契約의 無制限權限과 責任에서 오는 極右의 弱肉強食의 痘弊를 法律內의 民間企業의 契約自由保障하되相當數의 國公營이 있어 公共責任性과 國民經濟的 觀點을 先導하게 된다. 國公營의 擴大는 이以上 必要치 않을 것이며 다만 時間에 따라 彈力性을 保持해야 할 것이다.

다음 ②項에 있어서는 極右의 無制限的 利潤追求가 帶來하는 富益富貧益貧의 廢害를 除去한다는 極左가 實物重視的 計劃과 執行을 함으로써 利潤追求를 許容하지 않고 그에 따라서 나태의 要因을 提供하는 結果를 낳았다. 이에 臺灣은 適正利潤追求를 強調하면서 超過利潤은 課稅 其他手段으로 公共에 還收되도록 하고 있으며 한편 中國大陸에서는 資本主義式이라고 增棄하던 利潤制를 導入하여 Cost 概念과 利子概念까지도 認定하지 않을수 없게 되었다. 後者は 課稅 其他政策手段의 組合을 制度化해가면서 前者에 接近할 餘地가 있다 하겠다.

第3項과 關聯하여 極左에서는 計劃調節方式은 目標達成與否에 關係없는 無責任性和 機敏性의 缺如를 齊來하는데, 極右에서는 完全히 市場勢에 放任함으로써 國益과 公共利益을 들보지 않을 素地가 있다.

19. 指令經濟 Command Economy 란 社會主義 또는 共產主義經濟를 指述한 것으로, 그 시초는 Oleg Zinam, The Economics of command Economics, Merdeth Corporation에서.

## 產業研究

臺灣에서는 市場勢에 依한 調節을 主로하고 計劃에 依한 調節을 從으로 하여 私利와 公益間의 調和를 球하는데, 大陸側에서는 計劃調節을 優先하고 市場勢에 依한 調節을 加味할 것을 企圖한다. 여기에서 市場勢의 加味는 計劃達成後 生產物에 局限되는바 이는 同一商品에 二重價格을 形成하여 오히려 消費者를 強制시켜 計劃의 指標마저도 混亂을 갖어 올 것이므로, 좀더 右方向進展이 期待된다. 二重價格과 關聯하여 Drewnovsky의 二重選好體系 Dual Preference System<sup>20)</sup>은 모든 商品價格이 一物一價이 되 例를 들면 生產財는 公定價格에 依한 選好, 消費財는 市場價格에 依한 個人選好라는 方式으로 區分하여 二重이라는 點을 留意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注目해야 할바는 State Preference와 Individual Preference에 各己 屬하게되는 境界가 調整을 通해서 어느線으로가 收斂되게 될 것이다.

第④項에서, 極右 即 企業經營에 國家가 傍觀하는 姿勢를 取하면 包括會社가 發生하거나 獨占을 指向하여 公共의 利益을 害칠 素地가 있으며, 極左 即 中央計劃과 地方計劃으로 企業經營을 左右한다면 環境에 適應할때 硬直性이 나타날 것이고, 地域의 크기에 關係없이 모든 商品을 自給自足할때 不經濟가 甚할것이다. 이러한 弊端을 없애기 위하여 中國大陸에서는 企業權限을 擴大함으로써 硬直性, 不經濟를 打破하며 地域別計劃을 地域聯關으로 統合調和를 球한다. 臺灣에서는 企業의 權限을 保障하되 法定태두리 内에서 公共利益을 確保하고자 努力한다. 여기서도 兩者間에 接近이 可能할 것으로 생각된다.

第⑤項 極左의 管理行政體系는 그것에 隨伴하는 官僚主義의 慢延과 專門性의 缺如 그리고 企業間 有機性의 缺如等이 指摘되며 極右의 放任은 獨占化와 不當行爲, 投機等 여러가지 弊害가 指摘된다. 臺灣에서는 企業自律에 맞기되 公營企業과 合作社, 稅務行政, 金融等側面에서 間接的으로 公共責任을 誘導한다. 여기서도 거이 接近은 하고 있지만 大陸側의 國公營企業의 縮少가 더 있어야 할 것이다.

第⑥項, 廢業 操業停止等이 없는 極左에서는 無責性과 浪費, 나태가 橫行할 것이고 極右의 自然淘汰에는 僞裝閉業等 公益에 反하는 일이 빈발할수 있다. 이에 對하여 臺灣에서는 法定管理, 法定申告等을 必須要件으로 하고 있으며, 中國大陸에서는 閉鎖, 操業停止, 合併, 轉業의 企業整備가 官主導로 行해진다. 여기에서도 關停普轉의 官主導가 民間主導로

20. Jan Drewnovsky, The Economic Theory of Socialism, A Suggestion for Reconsider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Jan. 1961, pp. 341-354.

이루어지되 法的申告義務等을 賦課하여 弊害의 最少化를 期해야 할 것이다.

第⑦項, 極左의 民營不許에서 赤字企業의 個人請負經營으로 官僚主義를 打破하려는 것이 中國大陸의 現狀이 라면, 臺灣에서는 極右의 民營에 있을수 있는 獨占化와 超過利潤追求等 痘弊를 줄이기 위해서 民營爲主에 公營의 參加로써 市場勢에 影響을 미친다. 經營請負와 個人所有一個個人經營者의 優劣을 따질때 個人請負는 短期的效果가 더 클 것이고 私有經營은 長間的效果가 두루리질 것이다.

第⑧項, 極左의 完全公定價格은 需要를 歪曲하고 消費者欲求를 無視하는 配給制와 通하는데 中國大陸에서는 現在 部分的으로 市場價格을 導入하여 市場需要와 消費者欲求를 反映하려고 企圖한다. 極右의 市場價格은 買占賣惜과 暴利等 市場交亂可能性이 尚存하는데 臺灣에서는 市場勢에 맞기면서 租稅 其他 各種裝置로써 그 弊害의 最少化를 企圖한다.

歪曲은 長期的이고 交亂은 一時的이어서 그 是正은 後者가 더 容易할 것이다.

第⑨項, 極左의 終身雇傭은 本人의 意思를 無視함으로 나태, 無誠意, 無責任의 痘弊가 있어 現在 中國大陸에서는 勞動契約制로써 解雇의 길을 터 놓았다. 極右의 類似契約雇傭制는 착취와 不當한 待遇等의 弊害를 發生시켰으니, 臺灣에서는 雇傭契約을 締結하되 標準契約書式과 法定日數나 時間을 規定하고 法으로 認定하지 않는 事項도 規制한다.

여기서 吻味해야 할바는 하나의 極端에서 發生하는 弊害(例컨데 使用者的 橫暴)를 對應하여 또하나의 極端은 그 反射의 弊害(例컨데 被傭者的 無誠意)를 낳는다는 事實이다. 結局 追求하여야 할 最善은 兩者的 調和일 것이다.

第⑩項, 極左에서는 一方的雇傭下이기 때문에 基本給이 全部였는데 이와같은 狀況下에서는 活力を 期待할수 없고 나태와 無誠意가 慢延한다. 그리하야 中國大陸에서는 近者 基本給에 能率給을 合친 紿與方式을 取하고 곳에따라 賞與制度도 導入한 것으로 알려졌다. 極右에서는 不平等한 立場에서 類似契約賃金制下에서는 착취의 發生可能性이 있고, 그것을 是正하기 위하여 真正한 契約賃金制에 의해서 基本給外에 各種手當, 賞與金이 一般化되었으며 때론 成果給制도 通用된다.

여기에서도 雇傭과 마찬가지로 兩極의 弊害는 兩極端에 흐르고, 兩者間에는 調和를 求하여 收斂하게 될 것이다. 即 紿與支給者가 착취적勞賃의 權暴를 부리는 强者라 해서 被支給者인 勞動者를 强者로 位置를 바꾸어 놓으면서는 無誠意한 作業態度가 나온다. 거의 모든 人間生活에서 그렇지만 極端의 弊害를 除去시키려면 兩極間에 調和를 求함에 있어서 一方의 權暴을 最少化하되 他方의 誠意를 最大限 確保하는 線으로 接近시켜 가야 할 것이다.

## 結論

中國大陸에서는 過去 10 年間 改革과 開放을 제법 꾸준히 推進해 왔고 臺灣에서는 40 年間 民生主義를 指導理念으로한 經濟政策이 一貫되히 推進돼 왔다고 할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中國大陸에서의 改革과 開放이 끝 右傾化 即 自由主義나 資本主義로의 復歸를 意味하는 것은 아니고 어데까지나 社會主義의 根幹 또는 目標는 維持한다는 點은 그 改革主導人士들自身이 公言하고 있는 바이다. 다만 그것이 갖는 公有。公營 方式에 市場唯 카니즘을 導入하지 않고서는 國民經濟의 發展이 無望함을 깨닫고 나아가서 國民福祉의 物質的增進도 期待할수 없다는 點을 認識하게 된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改革主導人士들이 公言하는 바를 고지못대로 들을수도 또 對內政治的辭令이라고 생각 할수도 있다. 또는 兩面이 다 包括된 말이라고도 볼수 있을게다.例를 들어 中國大陸內의 어느學者가 市場經濟의 採擇을 主張할때 그것이 끝 美國式 市場經濟를 있는 그대로 直輸入한다는 것은 中國의思考方式에는 背치된다고 느껴진다. (여기서 中國의思考方式이란 中庸之道를 지켜 每事를 前後左右 上下遠近을 두루살펴 그속에서 調和로운 解答을 求하는 것으로 解釋한다.) 또한 社會主義를 守護한다고 하면서 그 核心인 公有公營과 상치되는 私營을 一部에서나마 許容한다는 事實도 똑같은 中國의思考의 結果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렇다면 그들의 認識의 變化란 均衡과 成長을 同時的으로 解決할수 없고 先成長後 均衡을 進求하야 한다는 事實이라고 본다. 富해짐은 罪가 아니다. 먼저 富해진 사람이나 地域은 가난한 사람이나 地域이 富해지도록 協力해주면 된다는 생각이 못살아도 같이 못사는 過去를 清算하게 된 것이다.

臺灣은 큰 財閥을 誕生시키지 않으면서 經濟成長에 成功한 境遇이다. 均富를 指向하되 市場唯 카니즘을 살리는 民生主義에 立却한 經濟政策의 結果이다. 民生主義가 自由下의 計劃이건 計劃下의 自由이건 間에 市場唯 카니즘을 尊重하여 人類復社의 向上을 指向하는 市場經濟와 公益을 尊重하여 人類福祉의 向上을 指向하는 計劃經濟 그 어느쪽도 拒否할 수 없는 均富를 求함이 目標일진대, 다만 그것의 到達을 위하여는 市場唯 카니즘을 尊重하는 바를 中共側에서 이미 受容한 以上 節制資本만 잘 하면 兩側이 經濟的으로는 接合될

收斂假說의 中國經濟에 의 適用可能性에 關한 研究

것은 틀림 없다.

다만 内部政治權力과 關聯하여 經濟外的인 問題에 크게 左右될 것인바 水到渠成 即 물이 흘러 도량이 패임을 기다려 기다려나 볼까。如何間 紅頭文件<sup>21)</sup>이 威力を 發揮하는 限에는 市場機能은 제대로 發揮할수 없을 것이다。

---

21. 黨指今文件이란 뜻으로 이에 關하여는 「開放10年과 都中關係展望에 關한 세미나」 (1988.12.20)에서의 하얼빈工大 馬仲可教授의 發言(朝鮮日報, 1989.2.1) 參照。

